

문대통령-여야 5당 대표 회동 급물살

문 초당적 협력 요청에 황교안 “어떤 회담도 수용”
윤석열 임명·외교 안보라인 경질 등 막판 변수로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와 관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청와대에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날 오후 일본을 향해 작심 비판을 쏟아낸 뒤 국회와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면서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간의 회동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언급하며 “위기 상황에 정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은 그 자체로 국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

하다면, 우리 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하겠다”며 “저와 한국당은 청와대가 진정성을 갖고 노력한다면 해법을 제시하고 힘을 보탬 자세와 각오가 돼 있다”고 했다. 황 대표는 대통령과 5당 대표와의 회동 형식도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형식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살리고 국가를 지키고 국민들 돕기 위한 모든 방식의 회동에 다 동의한다”고 답했다.

황 대표는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 5월 대북 식량지원 문제를 거론하며 대통령과 5당대표 회동을 제안했을 때에는 “일대일 대화로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사실상 거부사를 밝혔고, 이후 회동 의제와 형식 등을 두고 협의가 지지부진해지며 만남

이 성사되지 못했다. 황 대표는 그러나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와 한반도 평화 문제를 의제로 다루기 위한 ‘대통령-5당 대표 회동’을 다시 제안하자, 이번에는 일주일 만에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사실상 수용한 셈이다.

황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이 문제는 결국 외교적으로 풀 수밖에 없다”며 “서둘러 대일특사를 파견할 것을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일본의 잘못된 행동을 막아내도록 설득해야 한다”며 “국회 대표단의 방일과 함께 국회 차원의 ‘방미 대표단’ 추진도 제안한다”고 했다.

황 대표의 회견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5당 대표가 모두 모여 국정에 머리를 맞대는 일에 대해서는 청와

대는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다”며 “여야 간에 긍정적인 논의와 결과가 도출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대표가 사실상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수락한 것으로 보여 환영한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함께 모여 남북 판문점 회동, 일본 경제보복 대응 등 현안에서 초당적인 논의를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 간의 갈등이 커져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실무협의 과정에서 형식이나 의제 등을 두고 의견이 갈릴 경우 회동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장,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 문제, 정경두 국방장관 등 외교·안보라인 경질 등이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5·18 망언’ 김순례 최고위원 복귀 주목

18일 당원권 정지 종료
한국당 내부 이견 엇갈려

‘5·18 망언’으로 물의를 빚은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의 당원권 정지가 18일로 끝나면서 김 의원의 최고위원직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당 내부적으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김 의원의 복귀는 한국당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을 위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정계 기간이 끝나면 최고위 복귀가 수순이며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부분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중복 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말해 윤리위에 회부

됐으며, 당원권 3개월 정지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한국당 당헌·당규에는 당원권 정지시 최고위원 자격 유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징계 이후, 최고위원 복귀 여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의 복귀 여부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정무적 판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우클릭’을 거듭해 온 현 지도부 분위기를 감안하면 김 의원의 복귀에 손을 들어주는 유권해석을 내놓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다. 김 의원의 복귀는 민심의 반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곧 ‘망언 정당’의 기억을 되살리며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인 황교안 지도부에 상당한 고민 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이번엔 정미경... 한국당 또 막말

“세월호 한척 갖고 이긴 문대통령이 이순신 보다 낫다”

자유한국당이 다시 막말 논란에 휩싸였다. 정미경 최고위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순신 장군’ 발언을 비판하면서 ‘세월호 참사’를 언급한 댓글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문 대통령이 전란 도청에서 열두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며 이순신 장군을 입에 올렸다. 이 기사를 본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며 “어찌 보면 세월호 한 척 갖고 이긴 문대통령이 낫다더라”는 댓글이 눈에 띄어 소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임진왜란 때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개인만 생각하며 무능하고 비겁했던 선조와 그 측근들 아닌가”라며 “스스로 나라를 망가뜨리고 외교를 무너뜨려 놓고 이제 와서 어찌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입에 올리나”라고 되물었다. 정 최고위원이 ‘세월호 한 척’ 댓글을 읽자, 일부 당 지도부는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정 최고위원의 이날 ‘세월호 한 척’ 발언은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적 비난 여론에 직면하면서 국정 위기를 맞았고, 결국 정권 교체까지 이어진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 최고위원은 또 “(문 대통령) 자기는 잘못이 없고 일본이 잘못한 것처럼 말한다. 문 대통령의 머리에는 일본과 해결하려는 생각이 있나”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산 배설물은 문 대통령이 치우시는 게 맞고 아베가 산 배설물은 아베가 치워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게 제가 내린 정답”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잡자는 법안들 처리해야”

문희상 의장 전 국회의원에 편지

문희상 국회의장은 15일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겐 친선 서한을 보내고 “20대 국회의 남은 기간에 이 법안들이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현재 제20대 국회의 법안 발의 건수는 2만769건으로 역대 최고지만, 그 처리율은 27.9%로 역대 국회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특히 1만 4천783건이 계류 중이며 이 중 70.6%에 달하는 1만 432건은 단 한 차례도 법안소위 심사조차 거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일하는 국회법”이 오는 17일 시행된다면서 “법안 소위가 연중 상시로 운영되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개혁법안의 심의가 국회 안에서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욱 기자 tuim@



문희상 국회의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연합뉴스

‘정경두 해임안’ 암초 만난 추경... 여야 본회의 일정 합의 불발

민주 “19일 하루만 열자”

한국·바른미래 “이틀 열어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15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본회의 등 6월 임시국회의 남은 일정을 논의했으나 합의에는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회동하고 의

사 일정 추가 합의에 나섰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19일 하루만 열자는 입장이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표결을 위해 18일과 19일에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법상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

들과 만나 “전례 없는 (정 장관) 해임건의안과 (북한 목선 입항 사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의도는 명백하게 정쟁으로 보인다”며 “정쟁을 위한 의사 일정에 동의할 수 없고 민생과 추경을 위한 일정으로 일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 장관 해임건의안이 표결되는 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합의로) 약속된 18일 본회의를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해 동의하지 않는 집권여당이 도대체 제정신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18일과 19일에 본회의를 열고 정 장관의 해임건의안 표결을 마지막 안건으로 하자’는 중재안을 내놴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18일과 19일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남은 6월 국회 기간 본회의 없이 회기를 끝낼 가능성도 거론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추경 처리만을 위해 19일 하루만 (본회의를) 잡아야 한다는 것은 야당을 집권여당의 거수기 노릇을 하라는 것이라서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추석까지 10% 안되면 사퇴 약속 답변 보류”

손학규 바른미래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5일 ‘추석 전 당 지지율이 10%가 안 되면 사퇴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약속이 유효한지) 아직 답변을 못 드리겠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이 분열된 상태에서 싸움이 혁신위원회까지 확대가 될지는 (몰랐다)”며 “우리가 지지율을 높인다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봐야 한다). 답변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4·3 보궐선거 참패 후 퇴진 요구를 받은 손 대표는 지난 4월 15일 “추석까지 당 지지율이 10%에 미치지 못하면 대표직을 그만두겠다”고 밝힌 바 있어, 약속을 사실상 ‘번복’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손 대표는 “혁신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을 때는 당의 내분과 계파 갈등을 통합하고 하나가 돼 다음 총선에 대비하자는 생각이었다”며 “그런데 혁신위가 계파 싸움의 대리전이 되며 다시 혁신위원장 선임을 해도 위원회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손해보험협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약속

가장 힘든 순간 함께 하겠다는 약속, 손해보험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비바람에도, 예상치 못한 아픔에도
당신이 일어설 수 있는 힘 바로 손해보험입니다.